
	<h1>보 도 참 고 자 료</h1>		
금융위원회	보도	배포 시부터 즉시	한국주택금융공사 KOREA HOUSING FINANCE CORPORATION
책 임 자		담 당 자	
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 권 대 영(02-2156-9710)		금융정책과 사무관 류 성 재(02-2156-9718)	
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부장 정 하 원(051-663-8271)		금융정책과 사무관 류 성 재(02-2156-9718)	
		유동화기획팀장 이 철 우(051-663-8272)	

제 목 : 안심전환대출에 대해 제기된 주요 이슈에 대한 입장

1. 안심전환대출로 가계부채가 사상최대이고 증가속도를 잡는데 실패?

☐ 안심전환대출은 총량 관리 보다는 기존대출을 전환하여 가계부채의 증가 없이 질적 구조를 개선하는데 중점

☐ 분할 상환의 특성상 가계부채의 잔액이 감소하는 효과

❶ 안심전환대출 잔액은 매년 1.3조원 감소, 30년 32조원 감소

❷ 안심전환대출자 부채 증가율(0.5%)은
여타 은행 주택담보대출자(4.1%)의 1/8 수준

❸ 빚을 나누어 갚는 관행이 확산· 정착되고 있어
매년 약 7.5조원, 향후 25년간 186조원의 은행 주담대 감소 예상

*16.2월 신규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77%가 비거치· 분할상환 취급

◇ 안심전환대출로 가계부채가 증가했다거나 안심전환대출에
가계부채 증가속도 감축효과가 없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

○ 안심전환대출은 기존대출을 분할상환으로 전환하므로
중장기적으로 가계부채 감축 효과 보유

○ 최근 가계부채의 증가세는 기본적으로 주택시장 정상화,
금리 인하에 따른 대출수요 확대 등 복합적 요인에 기인

2. 안심전환대출은 고소득층 위주의 대책이 아닌지?

☐ '안심전환대출'은 외부충격에 취약한 기존 대출 구조를 개선하기
위한 가계부채 안정시책

☐ 실행된 총 32만건(31.7조원) 분석 결과, 목표했던 전체 가계부채
구조개선과 함께 중산층 이하의 대출구조 개선에도 크게 기여
→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모두의 부채구조를 개선

❶ 안심전환대출 이용자의 평균소득은 4천만원(보급자리론 43백만원)
으로 연소득 6천만원 이하가 전체의 80%를 차지

❷ 담보물이 주로 아파트(87.1%)임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은 평균
2.9억원이며, 6억원 초과 주택 비중도 4.7% 수준에 불과

* 아파트 평균매매가격(16.2월, 억원, KB부동산) : (전국) 3.0 (수도권) 3.8

❸ 대출금액은 평균 98백만원(보급자리론 1억원)으로 1억원 이하 비중이
전체의 64.3%를 차지

◇ 안심전환대출의 효과가 고소득층에 집중되고
서민층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름

3. 주담대 분할상환으로 서민의 은행권 문턱이 높아져 '15년중 비은행 대출이 증가했는데?

☐ '15년 비은행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4.5조원으로
'14년 5.8조원에 비해 1.3조원 감소(한은 가계신용)

☐ 비은행 → 은행권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되어 가계 이자부담 경감

* 가구당 월평균 이자비용은 전년동월비 5,400원(연 64,800원) 감소(통계청 가계동향) ⇒
전체 가계의 이자부담 경감은 연간 7,497억원(1,157만 가구)으로 추정

◇ 분할상환의 "원리금 부담으로 제2 금융권으로 내몰렸다"는
근거를 찾기 어려움

* 은행 '주담대' 분할상환의 풍선효과를 보기 위해서는
비은행 '주담대'의 동향을 비교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

4. 저소득층이 원리금 부담으로 안심전환대출 중도탈락?

- ☐ 안심전환대출 중도상환율(3.4%)은
여타 주택담보대출(13.2%)의 1/4 수준으로 매우 낮음
- ☐ 안심전환대출 차주의 소득계층별 비중과
중도상환자의 소득계층별 비중은 거의 유사
→ 소득과 중도상환율간 연관성이 크다고 볼 수 없음
- ☐ 만기가 장기화 될 수록 원리금 상환부담은 분산
 - 1억 대출, 금리 3.56%, 일시상환 대출 → 월 이자부담은 30만원
 - 금리 2.65%, 30년 분할상환 안심전환대출로 대환하는 경우,
월 상환부담은 40만원(원리금+이자) → 월 10만원 부담 증가
- ☐ 중도상환 사유도 담보주택 매매(약 81%)가 대부분으로
빚 상환을 중도 탈락이라고 보는 것은 부적절

(단위 : 억 원)	전체 (A)		중도상환(B)		중도상환율 (B/A)
		비중		비중	
2천만원 미만	84,125	26.6%	3,126	28.8%	3.7%
2~5천만원	110,240	34.8%	3,949	36.4%	3.6%
5~8천만원	74,332	23.5%	2,389	22.0%	3.2%
8천만원 이상	47,888	15.1%	1,388	12.8%	2.9%
계	316,584	100.0%	10,852	100.0%	3.4%

◇ 저소득층의 중도상환이 특별히 많다고 보기는 어려움

5.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범정부 종합 정책이 필요한 것 아닌지?

- ☐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기재부, 국토부, 금융위, 통계청, 금감원, 한은 등 범정부 차원의 가계부채 관리협의체 운영중
 - ➡ 부채 뿐 아니라 소득, 취약층 지원 등 다각적 접근
 - ① 상환능력 제고를 위한 가계소득 증대
 - ② 서민·취약층 지원 확대
 - ③ “부채” 측면의 관리를 종합적으로 추진중
 - ☐ 특히, 서민금융지원 강화방안(‘15.6), 효율적 개인채무조정을 위한 개선방안(‘16.1) 등 서민지원을 위한 정책역량을 집중
 - ① 미소금융·햇살론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서민금융을 지속
 - ②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반영한 채무조정 지원
 - ③ 서민지원 업무를 통할하는 서민금융진흥원(9월 출범 예정)을 통해 맞춤형 지원 확대 등
- * ① 국민행복기금 : 총 47만명 지원(‘13.3월~15년말까지 채무조정 지원자)
 ② 신복위 개인워크아웃 : 총 24만명 지원(‘13.3월~15년말까지 채무조정 지원자)
 ③ 4대 정책서민금융 : (‘15년) 4.7조원, 47만명 지원 → (‘16년) 5.7조원, 60만명 예정
 ④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인하 : 최대 330만명, 총 0.7조원 이자부담 경감

◇ 정부는 범부처 차원에서 일관되고 종합적으로 가계부채 문제에 접근하고 있음

6. 저금리로 인해 안심전환대출의 금리 인하효과가 없었다?

- ☐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2.65% 내외 → 역대 가장 낮은 수준
- ☐ 안심전환대출의 취급 직후인 전년 5월 이후 예금은행의 주담대 평균금리는 가장 낮았을 때가 ‘15.10월 2.90%(‘16.1월 3.10%), ECOS)

◇ 저금리로 인해 안심전환대출의 금리인하 효과가 없었다는 점은 사실과 다름

7. 안심전환대출은 정부의 자화자찬?

- 무디스('15.4월), “가계부채 위험 경감을 위한 대출 대환계획은 신용도에 긍정적”

* 한국 신용등급 Aa3 → Aa2 (12.18일, G20 중 7개국, 한중일 중 최고등급)

- FT('15.3월), “안심전환대출 프로그램으로 가계대출 구조 전환이 가속화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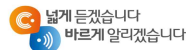
- 노무라('16.3월), “가계부채 구조개선으로 가처분소득대비 원리금 상환비율이 하락”

◇ 해외 신용평가사, 언론, IB 등은 정부의 가계부채 구조개선이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높인다는 점을 긍정 평가중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
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변인
prfsc@korea.kr



참고

서민·취약계층 금융지원 및 가계부채 안정화 노력

